

# 일본 신임 내각 인선과 한·일간 경제 영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영교 (yoonyk@kdb.co.kr)

- ◆ 일본 차기 총리로 지명될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그간 미온적이라고 평가되던 일본의 팬데믹 대응 경기부양정책이 총리 교체 후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최근 일본 금융시장은 긍정적 흐름
- ◆ 일본 신임 내각 인선과 함께,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이 확대될 전망이며, 총리 교체를 전후한 양국간 경제 및 교역 환경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환율 변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 가능성 관찰 필요

## □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새로이 선출될(9.29일) 신임 자민당 총재가 10월 중 차기 총리로 취임 예정

- 현임 스가 총리가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총리 교체 확정
  - 스가 총리 겸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9.30일이며 9.29일 총재 선거를 통해 결정되는 차기 총재가 총리직을 승계할 예정(10월 초 예상)
    - \* 자민당 총재는 현역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83명과 당원 383명을 합한 766명의 총 투표인단으로부터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당선
  - 만일, 현 중의원 임기 종료(10.21일) 후 실시되는 차기 중의원 총선\*에서 현 여당인 자민당이 패배할 경우 차기 수권 정당에서 총리를 새로이 선출
    - \* 현 중의원 임기 종료 후 40일 이내 실시되며, 오는 총선은 11월 하순으로 예상
  - 그러나, 창당('55년) 후 집권 외 기간이 5년여('93.8월~'96.1월, '09.9월~'12.12월)에 불과한 자민당 지지 기반\*이 내내 견고한 것으로 관측되어 수권 연장을 대체로 낙관
    - \* '21.9월 기준 자민당 지지율은 36%로 정당 지지율 1위를 유지(아사히신문, 9.12일 조사 결과)
  - 차기 자민당 총재 물망에 오른 기시다, 고노, 다카이치, 노다 등 4인 후보의 외교 및 경제 정책 노선은 대동소이

### < 참고 : 일본 정치제도와 총리 선출 방식 >

- 일본은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명목상 국가원수는 일왕(日王)이나 실질적인 정치권력은 총리에게 부여되며, 총리직은 의회(중의원) 다수당을 점하는 집권당 총재가 수행
- 일본 의회는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중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리 지명 및 내각 구성은 하원인 중의원에서 과반을 점한 정당이 수행,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경우 정당 간 연계를 통해 연립 내각 구성

- 일본 참의원의 주요 기능은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통한 중의원 견제  
 이나 중의원에서 해당 법안이 2/3의 찬성을 얻으면 참의원의 거부권 무산
- 참의원도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나 중의원과 지명한 후보자가 다를 경우 중의원  
 지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등 중의원에 비해 권한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 참의원(총 245석)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반수(半數)를 선출하는 방식이며, 중의원(총 465석)  
 임기는 4년이나 총리의 요구에 따라 조기 해산 가능(양원 모두 국민총선거 방식으로 선출)

일본 차기 자민당 총재 유력 후보 비교

성명(연령)	정책노선	장단점
기시다 후미오(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헌 찬성</li> <li>· 北·日 정상 대화에 개방적 입장인 반면, 국방비 지출 제한(GDP의 1% 이내) 관례에는 회의적</li> <li>· 아베노믹스 계승 의지</li> <li>· 중도 성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점) 당내 주요 파벌과의 원만한 관계로 의원표 득표에 유리하다는 평가</li> <li>· (약점) 정치적 성향이 경쟁 후보에 비해 불분명하다는 평가로 일반 당원 득표에 불리</li> </ul>
고노 다로(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헌 찬성</li> <li>· 아베노믹스 계승 의지</li> <li>·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li> <li>· 중도 성향, 외상 재임 시절('19년) 한국과 외교 마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점)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지지율</li> <li>· (약점) 취약한 당내 지지기반</li> </ul>
다카이치 사나에(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헌 찬성</li> <li>· 위안부 부인(否認),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찬성</li> <li>· 아베노믹스 계승 의지</li> <li>· 극우 성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점) 아베 전 총리의 후원 및 사상 첫 여성 총리 가능성</li> <li>· (약점) 지나치게 극우적인 성향으로 대중적 지지기반 취약</li> </ul>
노다 세이코(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한(日·韓)여성친선협회 회장으로 한국에 대해 타 후보에 비해 우호적 인사로 평가</li> <li>· 아베노믹스에 회의적</li> <li>· 중도 성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점) 오랜 내각 경험으로 행정 능력 검증, 사상 첫 여성 총리 가능성</li> <li>· (약점) 후보자들 중 인지도와 지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아베 전 총리와 대립각</li> </ul>

자료 : 언론 종합

□ **신임 일본 내각은 제한적인 통화정책 환경 하에서 재정 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양국간 경제 현안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

-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 등 주요국 정책 당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을 펼친 데 반해, 일본의 관련 정책 대응 강도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다는 평가

- 일본은 장기간 제로금리 정책을 운용해옴에 따라 추가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여타 국가에 비해 높아 적극적인 재정정책 수행에 대한 저항도 큰 상황

\*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25.3%(20년 기준)으로 캐나다(94.3%), 미국(108.4%)은 물론 서구 선진국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이탈리아(155.8%)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

- 일본의 GDP 대비 정부지출금액 비중을 보면 '20년에 전년대비 9.5%P 증가\*(37.2%→46.7%)하며 유로존 및 G20 평균치를 상회하였으나, '21년에는 그 비중이 3.7%P (46.7%→43.0%) 축소될 것으로 추정되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21년 일본의 재정지출이 다소 소극적임을 실증\*\*

\* 동기간('19~'20년) 중 미국은 10.5%P(35.7%→46.2%), 유로존은 7.1%P(47.0%→54.1%), G20는 9.3%P(38.6%→47.9%) 증가한 것으로 집계(출처: IMF)

\*\* 동기간('20~'21년) 중 미국은 1.2%P(46.2%→45.0%), 유로존은 0.9%P(54.1%→53.2%), G20는 1.5%P(47.9%→46.4%) 감소할 것으로 예상(출처: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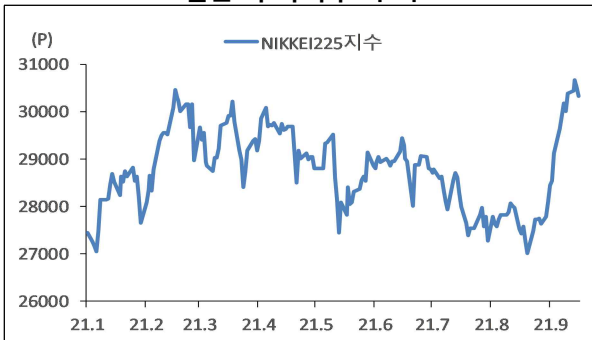
- 금번 팬데믹 기간 중('20.1월~'21.8월) 주요국 중앙은행의 총자산규모\* 증가폭을 비교해봐도, 일본은행은 이를 25% 증가 수준에 묶는 등 미 연준(200%)이나 ECB(176%)에 비해 시중 유동성 공급에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처해온 편

\* 각국 중앙은행의 총자산규모는 경기부양을 위한 자산(국채, MBS, 회사채 등) 매입 정책 진행으로 팬데믹 발생 이후 지속 증가

○ 최근의 일본 금융시장은 총리 교체 이후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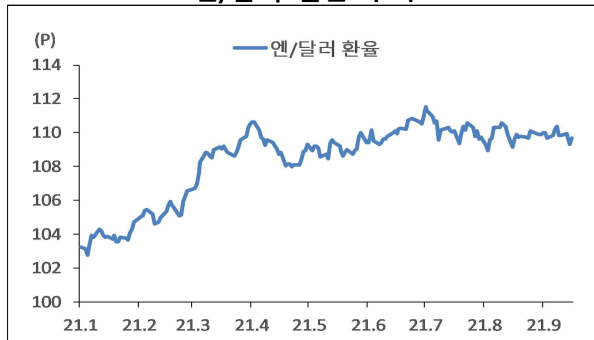
- 차기 총리 후보군은 현임 스가 정부의 팬데믹 긴급 재정정책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일제히 동조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재정 집행 필요성을 강조
- 스가 총리의 퇴진 선언 이후, 일본 증시가 상향하고 엔/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일본 외환 및 자본시장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과, 현재 수준으로 유동성 규모가 적정 관리될 것이라는 차기 정부 앞 기대치를 대변

일본 주가지수 추이



자료 : Refinitiv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 Refinitiv

- 일본 총선 이후에도 한국과의 외교적 긴장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원/엔 환율 추이에 연동한 대외 교역 영향 가능성 등은 지켜봐야 할 사항
  - 각 후보자들의 과거 발언 및 정치 활동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총리 교체 후에도 아베-스가 정권의 외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일 양국 관계 경색 국면은 총리 교체 후에도 이어질 전망
  - 한국의 對일본 교역 비중이 꾸준히 감소\*해온 점은 한·일간 교역 갈등 완화에 긍정적 요인이나, 일본 총리 교체 후에도 양국 긴장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진행된 핵심 부품 및 소재 부문 탈일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
  - \* 한국의 對 일본 수입 비중(%): 26.6('90년)→19.8('00년)→15.1('10년)→9.8('20년)
  - \*\* 일본 수출규제조치('19년) 품목의 일본 수입 의존도 변화('19년→'20년) : 포토레지스트(89.9%→87.5%), 불화수소(34.3%→12.2%), 불화폴리이미드(44.0%→38.5%)
  - 일본 경제정책에 의한 엔/달러 환율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한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 여타 변수에 따른 원/달러 환율 변동과 그에 따른 원/엔 환율 변동\*이 해외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의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
  - \* 원/엔 환율은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의 비율로 결정되는 재정환율로 미국 경제정책 등 한국 및 일본 경제정책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변수로도 변동 가능